

# 광주, 첨단산업으로 경제부흥 이끌어야

## 광주일보 73주년 제언

### <2>첨단산업 생태계 확보 위기 넘자

광주시 인구 140만명 선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 청년은 취업을 위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등 청년 유출이 심각하고 고령화 또한 가속화하고 있다.

6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광주시 인구는 141만 548명이었지만, 올해 3월 140만 2478명으로 5달 사이에 8000여명 감소했다. 광주는 지난해 인구 순유출률이 전국 1위였으며, 특히 20대 청년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민국 민주주의의 거대한 흐름을 이끌어내고 역사의 변곡점마다 대한민국을 지켜온 호남의 핵심 도시인 광주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광주시는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을 통한 먹거리 확보로 위기 극복을 모색하고 있다.

제조업 인프라가 취약한 광주의 선택은 첨단산업이다.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 미래 인구가 광주에 머물도록 도시의 활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시는 첨단 산업 중에서도 인공지능(AI)과 미래이동수단(Mobility) 산업 생태계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첨단산업 고도화 전략이다.

특히 광주 AI인프라는 어느 지자체보다 앞서가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국가AI데이터센터를 이미 구축한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광주시는 미래

### 11조원 'AI모델시티' 조성 추진

### 글로벌시장 선도할 기술 개발하고

### 미래 車 중심도시 기반 구축 시급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대한민국이 AI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에 빠르고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광주시도 이에 맞춘 11조 규모의 'AI모델시티'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데이터 집적·학습·활용 기반을 통해 AI기술의 선도를 이끈다는 것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AI 시장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초거대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AI 데이터뱅크 구축 및 메가 샌드박스 지정', 'AX 실증밸리(AI 2단계 사업) 조성', 'AI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양자·휴머노이드 테크산업 기반 구축'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구상이다.

우선 글로벌 수준(10만장) GPU(그래픽 연산 장치) 확보 및 컴퓨팅서비스를 위한 초거대 국가 AI컴퓨팅센터 조성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레아만 AI기업들이 광주로 몰려와 각 업체의 경쟁력 실증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다. 결국 이는 지역에서 육성된 AI인재들을 채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꾀하는 추가 효과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가로 AI기반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뱅크 구축 및 메가 샌드박스 지정과 이미 조성된 AI

인프라(국가AI데이터센터)의 고도화도 기업의 유치·인재 양성을 교두보가 될 수 있다.

또 광주는 국내 유일의 완성차 생산기지가 2곳(기아, 글로벌모터스)으로 연 72만대 생산능력을 보유한 우리나라 제2의 자동차 생산도시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곧 광주가 제조업의 43%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AI산업을 접목해 '메가 샌드박스형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에 최적지라는 의미다.

이에 광주시는 빛고개-미래차 국가산단 일원에 AI·모빌리티 기술융합 실증 인프라를 구축한 스마트 미래도시를 조성해 대한민국에서 미래자동차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미 빛고개산단에 구축한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는 국내 최대 166종의 친환경자동차 부품 시험·인증 장비를 구축해 기업의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미래차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드론, 수직 이착륙 이동수단 등의 연구·개발과 부품개발 등을 할 수 있는 연구시설(R&D) 산업단지 구축, AI기반 스마트제조혁신 및 자율형 물류·교통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21대 조기 대선이 30여일 남은 시점에서 각 정당 대선후보와 예비후보들이 광주지역 공약으로 AI와 미래 모빌리티 등을 약속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의 숙원사업인 AI와 미래 모빌리티 시너지를 공약으로 채택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정부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6·3 대선 현수막 6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외벽에 제21대 대통령선거일과 사전투표일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국·내외 인권단체 등 1500명 광주서 세계인권도시포럼

### 15~17일 김대중컨벤션센터

### "반인권 행태"...인권위 초청 안해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인권포럼)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광주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인권포럼은 세계 평화·인권 활동가들이 반평화적 상황에 맞서 누구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인권도시 간 연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다만 광주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가결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포럼 기획위원회의에서 인권위의 결정은 반인권적 행위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고, 당시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반발을 했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는 점에서다.

광주시는 15일 오후 2시 광주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인권포럼이 개막한다고 6일 밝혔다. 국·내외 인권도시, 관련단체, 국제기구 관

계자, 시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한다..

올해 15회째를 맞는 인권포럼은 광주시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기구가 공동주최한다.

당초 인권포럼은 10월에 개최됐으나 5·18기념주간에 더 많은 이들이 광주를 찾고, 민주·인권·평화의 오월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개최 시기를 5월로 옮겼다.

올해 인권포럼 주제는 '평화와 연대: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로 전쟁과 폭력에 맞서 인권과 평화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번 포럼은 개 폐회식, 전체회의, 주제회의(7개 주제), 특별회의(3개 주제), 네트워크회의(6개 주제), 국제인권연수, 특별·부대행사 등 7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국·내·외 인권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친숙한 연사들도 참여한다.

개회 기조연설은 국제 인권·평화운동가로, 동아시아 평화와 반군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서승우 석대 석좌교수가 맡는다. 서 교수는 1971년 유학생 신분으로 서울대 재학 중, '재일교포학생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간 옥고를 치렀다.

전체 회의는 '평화를 향한 지구적 연대'를 주제로 열린다. 신형식 (사)국민주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반평화적 상황과 인권공동체 미래'를 주제로 인권, 생태, 평화의 교차점을 짚으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제 회의는 마을과 인권, 사회적 경제, 어린이·청소년, 여성, 이주, 장애, 지구촌 반평화 문화 확산 등 7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국제인권연수는 아시아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광주시 인권정책과 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와 민주평화대행진 참가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직접 체험하는 현장교육도 실시된다.

미안야 군부 쿠데타 등지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와 폭력에 맞서 활동 중인 도시 관계자와 학생도시 인권운동가들이 직접 참여해 폭력에 저항하며 시민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을 공유하는 '특별 세션'도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세계인권도시포럼 공식 홈페이지.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양 도시개발 예정부지 거래허가지구 재지정

### 전남도, 덕례·도월 지구

전남도는 "광양시 덕례·도월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를 2028년 5월 6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광양 덕례·도월 개발사업은 2032년 준공을 목표로 44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6000세대, 1만 4000여명의 계획인구를 목표로 추진된다.

허가구역에서는 계약 전 광양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대상행위는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등이다..

매수지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

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행위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가 상승을 억제해 덕례·도월 도시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사람의 보험비교  
전 국민의 경제부담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스데 해볼래?**

**알바 댄스데 해볼래?**

**알바 댄스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p><b>금융감독원 콜센터</b>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p> <p><b>금융감독원 홈페이지</b>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p>	<p><b>각 보험회사 대표번호</b></p> <p><b>각 보험회사 홈페이지</b> 보험범죄신고센터</p>
--	--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KOREAN POLICE COMMISSION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IGFAA 보험GA협회